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1500만명 '역대 최대'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전주시, 지난해 관광객 전년 대비 36% 증가... 올해도 관광객 유치 총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 150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인원을 경신했다.

이는 전년(2022년) 방문객 1129만 4916명과 비교해 36% 증가한 인원이다. 이중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한옥마을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7만4425명으로 전년 1만 5414명과 비교해 4.8배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 150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인원을 경신했다.

시는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에 지속 노력하는 한편, 이곳에 집중된 관광산업을 시 전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펼친다. 당장 올해 여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한옥마을에 개관한 전주관광종합안내소를 본격 운영하고, 그간 추진해온 △전주세계문화주간 △전주문화제야행 △전통장극 공연 △시립국악단 공연 △전주예술나눔 △전주독서대전 △전주한지패션대전 △전주한옥마을 특화축제 등을 이어간다.

특히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지

외연 확장에도 힘을 쏟는다. 지난해 65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았던 통합축제인 '전주페스타'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더욱 풍성하게 채워간다. 한옥마을 인근 아중호수로 관광객

유도를 위해 전주관광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도 시작했다. 총 40억원이 투입되는 아중호수 야간경관 조성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선보일 안전빙커·

더 스페이스도 관광지 외연 확장에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빛과 조명을 활용한 우주여행을 방문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로써 한옥마을 찾는 방문객은 단순하게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민선8기 대표사업인 전주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 개발,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완산칠봉관광명소화 조성, 덕진공원 명소화 등이 차츰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사업들이 본격화되면 한옥마을에 집중되던 방문객에게 다양한 지역에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된다.

우병기 전주시장은 "지난해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연간 1500만명을 넘어섬에 역대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은 한 해였다"면서도 "이제는 외적인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져서 지역 경제에 녹아들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올해부터 아중호수와 완산빙커를 중심으로 한옥마을의 외연 확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사업들이 본격화되면 체류형 관광객이 늘면서 지역 경제 활력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가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2024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39명을 공개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능력자(청년일자리사업은 18~39세)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면서 가구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전주 시민이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 DB 구축사업 △모자간강 상담 및 접수 등 서비스지원 사업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 환경정비사업 등 총 71개 사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1일 7시간씩 주 35시간, 65세 미만 사업은 1일 5시간씩 주 25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시급 9860원과 간식비 5000원에 주·월차, 공휴일 유급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또는 전주시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도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시청 기후변화대응과를 통해 접수 받는다.

시는 올해 총 49억 원을 투자해 노후 경유차 약 1752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인 경우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디젤 엔진의 공해저감 장치의 일종인 DPF(디젤 미립자 필터)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배출가스 4등급 경우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확대돼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일 기준으로 전주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총중량 3.5톤 이상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접수 기간 첫 주인 4일부터 8일까지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35개 동 주민센터에서도 동시 접수하며, 이후 접수는 시청 기후변화대응과(현대해상 4층)에서만 받을 예정이다.

희망자는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으로 신청하거나, 전주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시청 기후변화대응과에 방문 및 팩스(063-279-4599) 신청을 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 삼천 버드나무 벌목 규탄”

전북환경운동연합·정당 등 성명 발표... 작년 3월 이어 1년만에 벌목 반복돼

전북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과 녹색정의당, 진보당 등은 "전주시가 전주천 삼천 일대 버드나무를 모두 잘라냈다"고 규탄 성명을 냈다.

이들은 4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지난 29일 새벽 야음을 틈타 전주천 남천교 일대 40여 그루의 아름드리 버드나무를 한 그루도 남김없이 잘라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잘려 나간 버드나무는 지난해 대규모 벌어진 하천 벌목에서 시민들의 항의로 지켜졌던 나무들이었다.

작년 3월에도, 시는 홍수예방을 이유로 크고 작은 버드나무 260여 그루를 잘라냈다. 그러나 "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어디에도 하천 내 수목 제거는 명시된 바 없고 오히려 습지의 현 상태를 유지 등의 계획을 세우고 규정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당시, 전주시의원 8인과 시민단체의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면서 버드나무가 35그루가량이 남은 상태에서 추가 벌목이 중단됐다고 한다.

이후 시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전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녹색정의당, 진보당 등은 "전주시가 전주천 삼천 일대 버드나무를 모두 잘라냈다"고 규탄 성명을 냈다.

생태하천협의회와 협의 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벌목은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최소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런데도 시장이 그 약속을 어기고 아무런 협의없이 야밤에 남은 나무도 모두 자른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

다고 했다.

이들은 우 시장의 하천 공약 사업이 개발복제시대로 돌아가는 시대착오적인 콘크리트 토목사업구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 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연하천 복원의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인정받은 전주천은, 생활다

양상과 경관은, 여울과 소를 조성하고 깎아내리고 물억새, 수크령 등을 심는 과정에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민회와 시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벌목으로 인한 여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 버드나무가 잘리고 난 후 전주천과 삼천에 인공폭포와 물놀이장, 파크골프장을 짓는 난개발 계획이 본격화 되고, 하천만이 아니라 한옥마을 케이블카를 놓고 민간공원 특례아파트를 짓겠다고 기린봉을 비롯한 도시공원의 나무도 잘라낼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전주시가 시민회, 환경단체와 생활다양성과 경관을 고려한 하천관리를 위해 전주생태하천 협의회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에 이 요구를 수락하지 않으면 위협적인 하천관리에 대한 감사 청구 및 고발 등 전주시장과 전주시의 책임을 묻는 강도를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하천법 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기준)에 의한 국토부의 매뉴얼에 의하면 '호암블럭' 구간은 벌목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는 지난 2월 14일 협의를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곧 우기 등이 도래 되므로 안전상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